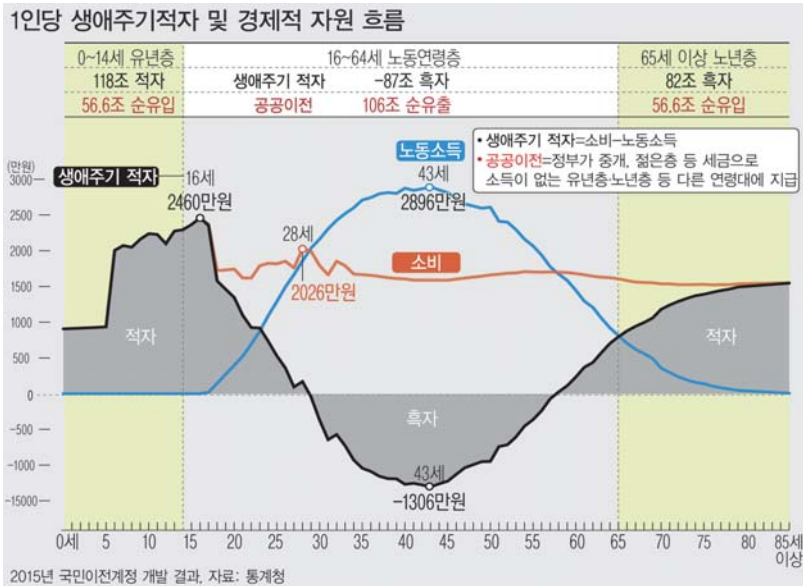


연령별 소비·소득·배분 통계 나와...58세부터 적자

통계청,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 발표
0~85세 연령대별 소비·노동소득 흐름과
'생애주기적자' 메우는 '연령재배분' 담겨
'연령대 간 재정 부담' 나타내는 지표 탄생
'국민연금·건보 등 정책 개발에 적극 활용'



정부가 22일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국가통계를 개발해 발표했다. 민간 소득과 정부 재정 등이 0~85세 이상 각 연령대 사이에서 어떻게 이전(Transfer) 및 배분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정책을 개발할 때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만들었다. 연령대 간 이전을 통한 경제적 자원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이 통계의 핵심이라 국민이전계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통계청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번에는 2010년부터 2015

년까지 6년간 자료만 공개했다. 통계청은 작년 4월 국민이전계정 통계작성 승인을 알린 뒤 조사를 거쳐 이날 발표했다.

◇1인당 노동소득, 43세 정점 후 88세부터 적자

국민이전계정에 따르면 2015년에는 유년층(0~1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은 생애주기적자가, 노동연령층(15~64세)은 생애주기적자가 발생했다.

유년층 적자는 17세(15조2000억원)에, 노동연령층 흑자는 44세(11조8000억원)에 가장 컸다. 국민 총액이 아닌 1인 기준으로는 유년층 적자의 경우 16세 2460만원이, 노동연령층 흑자는 43세 1306만원이 최대다.

1인당 교육·보건 등 공공소비는 10세에 가장 많은 1214만원을 사용했다. 교육·보건 등 민간소비는 28세가 174만원으로 가장 컸다.

노동소득은 2896만원을 벌어들인 43세가 정점이다. 직장인 임금소득은 40세 2759만원이, 자영업자 노동소득은 51세 2051만원이 가장 컸다. 58세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

◇공교육·부모 부양 등 연령재배분, 16세에 'IN' 43세에 'OUT'

국민이전계정에서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 순유출로, 생애주기적자는 연령재배분 순유출로 각각 연결된다. 생애주기적자·흑자 균형을 연령재배분으로 맞추기 때

문이다. 1인 기준으로는 16세에 2460만원(최대)의 연령재배분이 순유입된다. 순유출의 경우 43세에 1306만원(최대)이 빠져나간다.

공교육·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공이전의 경우 0세부터 21세까지는 순유입이, 22세부터 59세까지는 순유출이, 이후 60세부터는 다시 순유입이 차례로 발생한다. 어렸을 때는 공교육 지원액이, 은퇴한 이후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액이 큰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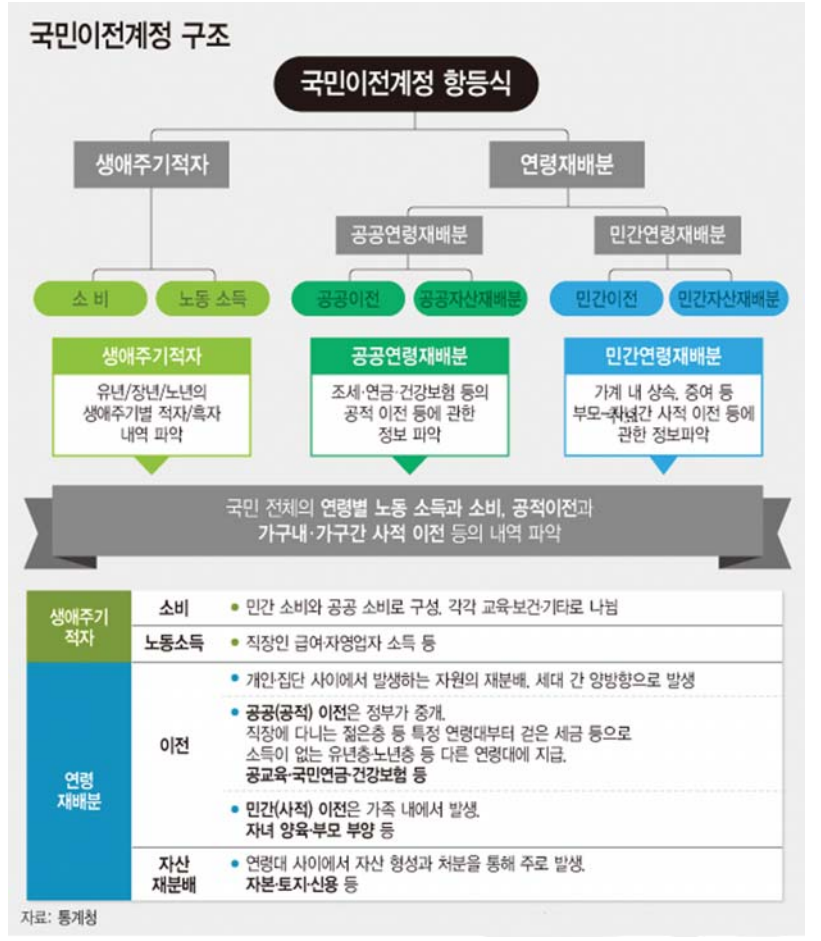
자녀 양육·부모 부양 등 민간이전은 0~28세 순유입, 29~64세 순유출, 65세부터 순유입이 나타난다. 28세까지는 부모님의 양육 지원을 받고 65세부터는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다.

자본·토지·신용 등 자산재배분도 있다. 공공자산재배분은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출이, 민간자산재배분은 대부분 연령대에서 순유입이 각각 발생했다.

◇고령화 심화...노년층 건강보험 소비액 증가세 뚜렷

2010~2015년 시계열로 보면 노년층의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공공보건소비 증가세가 뚜렷했다. 노년층 공공보건소비액은 2010년 13조9270억원에서 2015년 23조1020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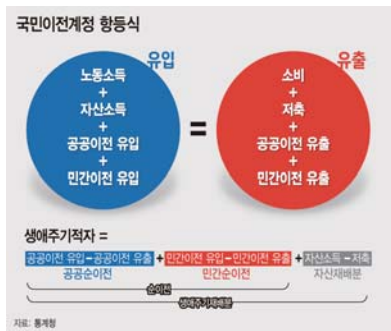
같은 기간 유년층의 공교육 등 공공교육소비비는 들쭉날쭉했다. 2010년 26조3200억원에서 2012년 38조474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가 이듬해 33조9970억원으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통계청은 "고령화·저출산 현상이 반영됐다. 노년층의 증가로 공공보건소비액이 많이 늘어났고 유년층은 1인당 교육비의 증가와 총 인구 수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공교육소비액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것"이라면서 "공공보건소비액 증가세는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고 공공교육소비액은 당분간 증가를 반복한다 장기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국민이전계정 통계 작성에 국민계정·가계금융조사·노동패널조사·교육통계·건강보험통계 등 자료를 활용했다. 정부가 국민이전계정 국가통계를 직접 내놓은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통계청은 국민이전계정 개발에 대해 "한국 사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고령화의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일하는 노인 증가... '소비>소득' 적자인생 늦어진다



쓰는 돈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는 적자 연령대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고령화에 따라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

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국민이전계정 개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노동소득을 소비가 앞지르는 연령은 2010년 56세였다가 2011년 57세로 높아졌고 2015년 58세까지 올라갔다. 이때 소비는 의료비 등 보건소비와 학교·학원에 쓰는 교육소비, 기타소비 등이다. 노년층(65세 이상) 인구의 노동소득은 계속 증가세다. 2015년 기준 노년연령층(15~64세) 인구의 노동소득 총액은 전년 대비 5.3% 증가했는데 노년층의 노동소

득은 12.4%나 늘어났다. 노년층의 노동소득 중에서도 임금소득은 13% 자영업자 소득은 9.3%로 노동연령층을 앞질렀다. 고령화의 여파는 노년층(65세 이상)의 공공 보건 소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유년층(0~14세)과 노동연령층의 공공 보건 소비는 전년 대비로 각각 4.5%, 6% 증가했는데, 노년층은 11.1%가 늘었다. 통계청은 또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 규모가 매년 10% 내외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1인당 공공 보건 소비를 보면 17

세 33만원씩 나가던 것이 85세 이상이 되면 535만원까지 나가게 된다. 노년층의 공공 보건 소비는 23조1000억원으로 전체 공공 보건 소비의 38.6%를 차지했다. 민간부문의 보건 소비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인당 민간 보건 소비는 17세때 20만원으로 가장 적었고 75세때 130만원으로 최대를 기록했다. 최마을 통계청 경제사회통계연구실장은 "노년층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소비의 증가가 미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은 감당하지만 나중에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년층 외에도 유년층 역시 소비

가 소득보다 많은 적자 연령 구간이다. 유년층은 노동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유년층 소비의 대부분은 교육이었다. 공공교육 소비는 37조원, 사교육 등 민간교육 소비는 13조원 가량이었다. '적자인생'을 살던 유년층에서 소득이 소비를 앞지르는 '흑자인생'으로 돌아서는 시기는 점차 늦어지는 추세다. 2010년에는 27세부터 흑자로 돌아설 수 있었지만 2015년에는 29세까지 늦춰졌다.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종합하면 취업도 늦어지고 은퇴도 늦어진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이처럼 유년층과 노년층이 만드는 적자분은 노동연령층의 소

득이 재분배되면서 폐쇄된다. 각 연령 조세나 상속 등 공적·사적이 전 등을 포함한 '연령재배분'을 보면, 유년층과 노년층에서는 각각 118조원, 81조6000억원의 순유입이 발생했고 노동연령층에선 87조원의 순유출이 나타났다. 특히 조세를 통해 공교육이나 국민연금 등으로 지급하는 '공공이전'의 경우 유년층과 노년층에선 각각 56조6000억원, 49조4000억원씩 순유입했지만 노동연령층에선 106조원이 순유출됐다. 한창 일 할 나이대면 유년층과 노년층에 각각 56조 6000억원, 49조4000억원씩 재분배된다는 이야기다.

뉴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